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은 서울시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6월말 기준 13.8%에서 2020년 15.4%, 2025년 19.5%, 2030년 2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